

포털 사이트 내 가짜 뉴스 문제의 해결방안

양창규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2024-04-25



가짜 뉴스

❖ 가짜 뉴스 = 명백하게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는 부정확한 정보

01

가짜뉴스

가짜 뉴스의 내용적 특징. 내용적 차원에서 가짜뉴스는 사실과 다른 “오정보(Missinformation)”

허위정보는 사실과 다른 정보라는 점에서는 오정보에 속하지만 해당 정보를 생산하고 퍼트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정보이다(Fetzer, 2004).

오정보가 **사실이 아닌 정보의 총칭**이라면 허위정보는 오정보 중 **특정한 의도가 담긴 거짓 정보를 지칭**하는 하위 범주라 할 수 있다.

02

확증편향

자신의 견해 또는 주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하고 믿고싶지 않은 정보는 외면하는 현상

확증편향으로 인해 “특정집단”의 사람들에게 가짜뉴스가 유용한 정보로 인식될 수 있다(Allocott & Gentkwo, 2017)

집단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명확한 증거에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Flynn, Nyhan, & Reifler, 2017) 신뢰를 바탕으로 전파될 수 있다.

03

적극적 오인자

틀린 지식을 바탕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눈에 띄게 활동하는 사람들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옳다고 “**느끼는**” 사람들.

이들은 올바른 정보를 알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잘못된 정보를 옳다고 믿는 사람들.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다소 다른 의견을 가지고 다르게 행동하는 경향.

미디어에 기인한 정치권 가짜 뉴스의 변화

❖ 병풍사건(2002년) - 대선후보인 이회창 전 총리 병역면제 의혹 제기

- 지상파 3사 대대적 보도, 지속적인 상대후보 측의 문제제기 → 대중들은 병역면탈이 마치 사실인 것 처럼 인식
- 대선 전 의혹이 이미 해소되었지만 군대를 안간 사실만 언급 → 의혹은 증폭되고, 해명을 믿지 못하게 됨
- 대선이 끝나고 나서야 두 아들의 병역면탈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음이 밝혀짐

1) 허위를 주장한 핵심인 김**씨는 수사관을 사칭했다는 사실로 구속수감

2) 의혹을 제기한 설*국회의원도 집행유예 판결

3) 김모씨의 의혹을 편파적으로 보도한 미디어(오마***, 일요** 등)들은 1억원 배상 판결 확정

가짜 뉴스의 원인을 찾을 수 있고, 늦더라도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구조

미디어에 기인한 정치권 가짜 뉴스의 변화

❖ 침대사건(2016년) - 박근혜 전 대통령 3개의 고가침대 의혹 제기

- 당시 전**의원의 추측성 발언을 통해 의혹 제기 → 미디어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박(“품격 떨어지는 얘기”)
- 개인미디어 방송인들의 지속적인 의혹 확산 → 침대사건은 성관계, 마약, 돈, 박근혜 거울방 등 저질 이미지로 변질됨
-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인터넷 매체들도 의혹 제기 참여 → 마타도어가 난무하는 상황
- 이후 침대구입과 박근혜 거울방 의혹이 가짜 뉴스로 밝혀지고, 개인미디어 방송인의 의혹제기도 사실이 아님이 밝혀짐

- 1) 개인미디어 방송인 주**씨는 사실임을 확신하지만, 아직은 증명할 수 없다고 해명
- 2) 인터넷 매체들은 침대사건에 대해 더 이상 언급도 없고, 사실확인이나 사과도 하지 않고 지나감

가짜 뉴스의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다양한 미디어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로 변화

미디어에 기인한 정치권 가짜 뉴스의 변화

❖ 청담동 술집사건(2022년) - 한동훈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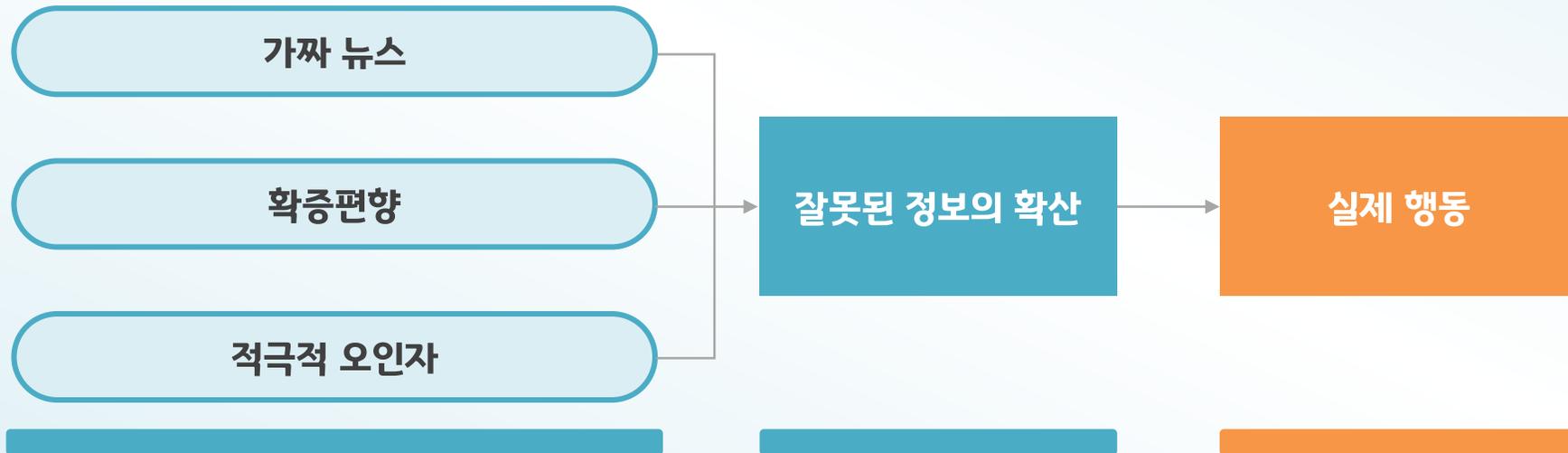
-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김**의원의 의혹 제기 → 정당 지지자들은 의혹에 대해 이미 사실로 규정
- 유튜브 채널(더**) 근거가 취약한 의혹 보도 → 제보 형식의 근거 취약한 추측성 보도지만 사실처럼 인식되기 시작
- 제보자라고 특정되는 인물들이 오히려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해프닝

- 1) 가짜 뉴스로 판명이 났지만 여전히 인터넷 매체 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혹 제기 → 사실은 중요치 않음
- 2) 다른 사건과 연결시키면서 검증 없이 개개인의 편향적 사고를 자극하기 위해 노력함

가짜 뉴스의 원인도 중요하지 않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도 명확하지 못한 환경

가짜 뉴스의 문제점

- ❖ 가짜 뉴스의 확산 - 잘못된 정보의 확산으로 각 계층에 적극적 오인자를 양산하게 되고 더 나아가 실제행동으로 이어짐
 - 가짜 뉴스 오정보(Misinformation) 중 특정한 의도가 담긴 거짓 정보를 지칭
 - **확증편향** 자신의 견해 또는 주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하고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외면하는 현상
 - **적극적 오인자** 틀린 지식을 바탕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로 자신의 지식이 **옳다**고 느끼는 사람들



가짜 뉴스 사례

사례(1) - 김일성가짜항일운동설

- [북한](#)의 최고 지도자였던 [김일성](#)이 [일제강점기](#) 저명한 항일 투사의 이름을 도용한 가짜라고 주장한 설
- [1945년 10월 14일](#) 김일성의 평양 연설 이후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제기
- 특히 군사정권의 반공 통치가 강화된 60년말부터 [반공](#) 성향의 학자나 언론인 등에 의해 퍼지기 시작
- 심지어 당시의 아동/청소년용 반공 교육서적이나 반공정신 함양매체(동화, 소설, 만화 등)에서 버젓히 통용될 정도로 한때 남한 사회에서 꽤 널리 통용



가짜 뉴스 사례

사례(2) - 이회창아들병역비리사건

- 지상파 3사, 그 중에서도 [KBS 9시 뉴스](#)에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1997년과 2002년 대선에서 줄기차게 [김대중](#)과 [노무현](#) 대선후보 측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대중들에게 병역면탈이 마치 사실인 것과 같은 인식을 심어줌
- 선거 운동 시 "이회창씨의 아들은 군대를 안 갔습니다."라는 범죄와 연관이 없는 팩트만으로도 주도권
- 이회창의 두 아들이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탈했다는 의혹은 완전히 해소가 되었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음이 밝혀짐



가짜 뉴스 사례

사례(3) - 박근혜전대통령침대사건

- 2015년, 민언련 사무총장 출신 최민희 전 의원이 박근혜 靑 관저에 고가 침대 3개 존재 의혹 제기
- 2016년 말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 불거지면서 정운희와 밀회 즐겼다는 의혹 근거로 활용
- 최서원(순실)이 관저 3개 침대 중 1개 사용했다는 흑색선전도 난무
- 침대 3개 중 1개는 MB 정부가 구입... “박근혜 전 대통령은 前 정권 물건은 하나도 손대지 않았다”(전 청와대 핵심 관계자)
- 침대 2개 중 1개는 박 전 대통령 사용, 나머지 1개는 역대 대통령 휴가지 거제시 저도로 보내
- 사방이 거울로 된 ‘박근혜 거울방’ 의혹도 가짜뉴스



가짜 뉴스 사례

사례(4) - 한동훈청담동술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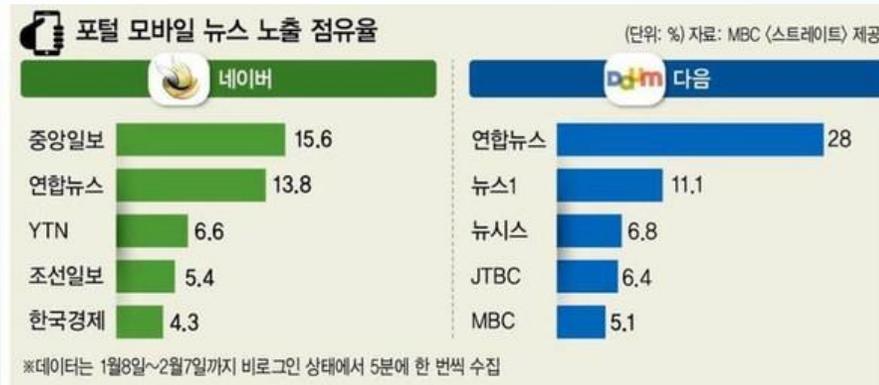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술자리에 머물렀다'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
-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녹취 공개...제보자는 첼리스트 남자친구
- 더탐사 "술집 장소, 청담동 지하에 있고 수정이라는 사장님이 운영 중"이라고만 주장
- "목격자 첼리스트, 남자친구와 결별 상태라서 연락 닿지 않는다"
- 해당 자리 주선 인물 지목 이세창 "장소도, 인물도, 팩트도 없는 가짜뉴스...모든 법적조치 취할 것"



포털을 통한 뉴스 유통의 수익구조

❖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고 확산되는 이유?

- 포털 노출하는 언론사를 취사 선택하고, 댓글 인링크를 통해 언론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광고료)
- 댓글 익명성에 기인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을 통해 평소 가지고 있는 분노 또는 확증편향성을 분출
- 일부 언론 적극적 오인자의 틀린 지식이나 자극적인 가짜 뉴스를 활용하여 수익창출에 집중



포털이 언론을 쥐락펴락하고 뉴스와 댓글을 통해 장사를 한다는 주장은 오래 전 이야기

포털을 통한 뉴스 유통의 수익구조

❖ 같은 기사라도 아웃링크와 인링크의 차이?

- 동일한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웃링크와 인링크는 차이 큼
- 아웃링크 → 언론/생산자(뉴스)의 수익
- 인링크 → 유통자(포털)의 수익으로 언론/생산자(뉴스)에 일부 수익 나눔

포털은 생산 없이 유통만으로도
더 많은 수익창출



포털 공룡이 가진 강력한 힘

❖ 독점적 기술우위 및 인증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공공사업 독점/영향력 행사

네이버·KT, 정부 '초거대 AI 생태계 구축' 사업 공급자 됐다

윤진우 기자

입력 2023.06.05 18:32

네이버, 정부의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사업' 참여사로 선정

IT·과학

민관협력 필수인데...네이버 데이터센터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거부

수정 : 2022-07-31 21:39:56

가  

네이버·카카오에서도 앞으로 SRT 승차권 예매 가능

윤선훈 기자 | 입력 2023-06-26 12:00

- 민간시장의 독점적 우위를 기반으로 더 이상 공공사업에 대한 경쟁자가 없는 사실상 독점 상태
- 민관협력을 이유로 공공사업에 참여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공공사업을 위한 책임은 회피?

포털 공통이 가진 강력한 힘

❖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Amazon Antitrust Paradox) – Lina Khan, 2017

- **약탈적 가격책정** 당장의 이익 대신 공격적 투자를 통한 기업성장(예: 아마존 프라임)
 - 경쟁을 강화해 어느 한 온라인 플랫폼이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시장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함
 - 손실회복심사를 폐지하고, 기업들의 합병 심사를 더욱 강화해야 함
- **비즈니스 라인의 수직통합을 통한 확장** 여러 비즈니스를 활용해 지속적인 독점적 지위 확보
 - 독점 플랫폼들을 인정해주는 대신 **적합한 규제들을 통해 그 힘을 관리하여야 함**
 - 공공사업규제와 공용사업자(Common Carrier) 의무 부여

플랫폼 기업(포털)의 약탈적이고 교묘한 기업경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

포털 공룡이 가진 강력한 힘

❖ 국가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논의는 국가마다 보유한 회사와의 이해관계, 시장규모 등이 모두 달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을 통해 포털 공룡에 대한 규제 실시
- 영국 대형 플랫폼을 지정해 독과점 피해 막겠다는 의지
- 독일 규제 플랫폼 지정 근거 마련, 독과점 남용에 대한 입증 간소화
- 미국 대형 플랫폼 대부분이 미국기업 → 아직까지는 제도화에 한계



유럽
연합
(EU)

- 디지털시장법(DMA) 올해부터 시행
- EU 내 매출액 75억원 이상 플랫폼 기업 분야별 (검색·광고·오픈마켓·SNS·메신저 등) 지정
- 지정 기업에 의무이행 강제하고, 각 기업이 이행 실적 입증



영국

-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 입법 절차
- 개별 기업과 협의 통해 영국 경쟁당국 재량으로 사전규제 대상 지정, 이행 의무 부과



독일

-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하는 조항을 추가해 경쟁제한방지법 개정
- 규제 대상으로 구글·애플·메타·MS 등 지정
- 독과점 남용에 대한 입증 절차 간소화



미국

- 미 하원 발의한 5개 반독점 패키지 법안 중 기업결합 신고 수수료 인상안만 통과. 나머지 법안 모두 폐기
- 플랫폼 규제 관련해 추가 논의 없음



대만

- 대만 공정위, 플랫폼 규제 관련 보고서 발간
- 기존 경쟁법을 넘어서는 별도의 규제 필요성에 대해 신중론

포털 공룡과 언론 이대로 좋은가?

❖ 다양한 분야에서 나오는 포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 대다수의 국민들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지만 가짜 뉴스에 대한 인식은 부재 → 가짜 뉴스를 통한 장사가 가능해?
- 뉴스를 생산하고 책임지는 언론과는 다르게 포털은 권리는 있지만 책임은 없음 → 단순한 중개업으로 수익?
- 포털의 뉴스 유통장악은 언론이 양질의 뉴스보다 자극적인 가짜 뉴스를 선호하게 만듦 → 포털에 종속되는 언론?

❖ 아웃링크 시대 도래했지만 여전히 아웃링크를 주저하는 언론

- 아웃링크 제도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택한 언론사는 여전히 소수 → 아직까지 주류 언론 실험의 장?
- 포털에서 발생하는 수익(광고료)에 의존하는 다수의 언론사 → 양질의 기사를 통한 독자기반 수익모델 전략 부재?

건전한 저널리즘 정립을 위한 제안

❖ 포털의 뉴스유통 방식 투명성 확보

- 포털이 기사배열, 광고배분, 제휴심사 등을 통한 언론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
→ 네이버, '뉴스 검색 인기도' 입맛대로 바꿨다... 野 압박에 MBC가 방송사 1위(TV CHOSUN 뉴스, '23. 6. 29.)

❖ 아웃링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링크 중심의 포털의 운용 방식 개선

- 포털 광고수익에 의존하지 않는 아웃링크 제도를 정착시켜 양질의 뉴스를 통한 독자기반 수익모델 발굴
→ 자극적인 뉴스로 인한 저널리즘 황폐화 방지책 마련

❖ 포털 내 언론관련 분야의 분사

- 실질적으로 언론의 역할을 하는 분야를 분사시켜 언론과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
→ 분사를 통해 투명한 광고료 관리체계 마련

건전한 저널리즘 정립을 위한 제안

❖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법정기구화

-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공룡에 언론사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시급
→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유사 언론

❖ 뉴스 유통자인 포털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부여

- 포털을 통한 뉴스 유통 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한 관리감독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에 대한 권한 부여
- 포털(또는 언론관련 분사)가 언론으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 언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미디어 등 신생 미디어에 대한 제도 마련

- 개인 유튜버, SNS 뉴스 등이 언론으로써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무분별한 가짜 뉴스에 대한 피해와 관련된 문제의 공론화

감사합니다.